

산업연, 한국경제 올해 플러스 성장...낙관 배경 '재정정책'

올해 성장을 전년대비 0.1%로 '플러스' 성장 예측 1~3차 추경 등 정부 재정투입 효과 '최대기여' 분석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대비 0.1% 성장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역성장을 예측하는 등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연구원은 22일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 수출 감소세 지속과 소비 감소 전환, 투자수요의 제한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에 내보낸 종전 전망치(2.3%)와 비교하면 2.2%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종전보다 크게 낮춘 전망이긴 하지만 국내의 주요 기관들과 달리 성장을 전망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전년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Single-hit)에선 1.2% 감소를, 방역에 실패해 10~11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시나리오(Double-hit)에선 2.5%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한

국은행도 올해 0.2% 감소를 예측하며 역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타 기관들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산업연구원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와 반도체·조선 등 일부 주력 산업의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 규모는 지금까지 약 270조 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914조원의 14.2%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 35조3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비와 투자 위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1% 감소, 민간소비는 1.9%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한 점에 비춰보면 재정정책을 통한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는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차 추경(23조9000억원)으로 올해 성장을 0.5% P가량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했다. 3차 추경이 집행된다면 1·2차 추경보다 높은 규모를 감안하면 성장을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을 2.0% 달성해도 정부 기여도는 민간 기여도(0.6%)의 3배 수준인 1.5% P나 차지했다고 분석된 바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정부에서 투입한 재정은 대부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져 높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적절히 잘 한다면 우리 산업·경제가 한단계 업그

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효과 외에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주력산업의 선전도 성장을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고, 조선 역시 해운사업 재건을 위해 발주된 초대형컨테이너선 등 여러 선박이 본격 인도되면서 수수한 7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산했다.

다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일어나면서 수출 등 한국 경제는 다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복불가에 접할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 추이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에 차세대 전력기자재 지원센터

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6건...총 3억원 지원 국토부, 혁신도시 기속화를 위한 기획비 지원 사업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중 6개 지역이 우수사업에 선정돼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 기획비 총 3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우수 사업 6건을 최종 선정했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 3억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우수사업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선정된 6개 사업은 △차세대 전력기자재 지원센터 구축(광주·전남) △디자털 그리드 핵심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광주·전남) △바이오소재 개발 기반 조성 사업(경북) △스마트시티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지원체계 구축(충북)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사업(제주) △혁신도시연계 완주소셜 굿즈 혁신피크(사회경제허브) 조성사업(전북) 등이다.

이대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과장은 "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한 전기방석 3개(극세사 온열 전기방석 등)받아 폐모리폼 쿠션 방석 2단, JRL, T001, D-150, 부력기준 미달의 구명복 2개(슈프림 오브라이언, 성인용 물놀이 바다 낚시 수영 웨이크 베스트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 주행 내구성이 부족한 유모자 1개(506)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라며 '세부 조사내용은 제품 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 별도로 20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는 이달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나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율로퀵 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인 카시트는 조사대상 5개 중 3개(모델명: Advocate Clicktight, MICO 30, Child Car Seat)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그 중 1개(Child Car Seat)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게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이외에도 표면온도 기준치(50도)를 초



대학생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인천공항공사·한국전력·顺

선호 이유 "고용 안정성→高연봉·관심업종"으로 변화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대학생 1045명을 대상으로 2020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인천공항공사(18.4%)를 꼽았다. 지난 2018년부터 동일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를 고른 이유를 살펴보니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24.1%)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여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22.8%)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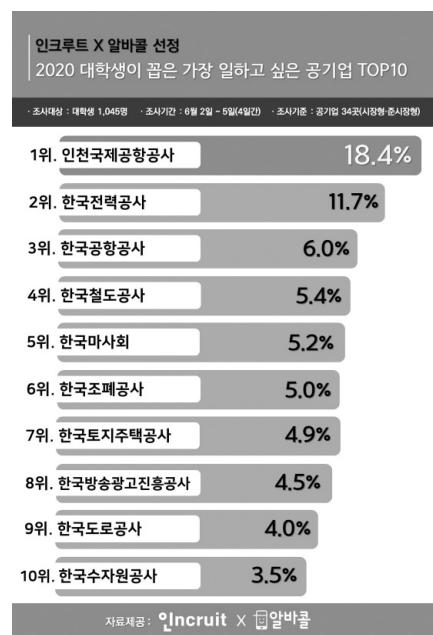
2위는 지난해 1위를 차지한 한전(11.7%)이 이름을 올렸다. 한전은 남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12.4%)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공항공사(6.0%)와 한국철도공사(5.4%)가 그 뒤를 비까 쫓으며 3,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권 밖이었던 한국마사회(5.2%)는 5위로 새롭게 랭크됐다. 마사회는 직원연봉 평균기준 8900만원(2019년 기준)으로 조사돼 공기업 연봉킹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어 한국조폐공사(5.0%)와 한국도자주택공사(4.9%)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상반기 공채 외 채용연계형, 체험형 인턴을 모집 중이다. 인크루트는 운영하는 공기업·공공기관 전문관을 통해 기관들의 신규 채용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 한 결과 1, 2위에 관심업종(19.9%)과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17.7%)를 꼽은 점이 눈에 띈다. 매년 조사마다 공기업 선택배경에는 고용안정성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공기업 선호 이유로 기존의 고용안정성 외에도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급여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작용했던 점에서 공기업을 대하는 대학생들의 달라진 태도와 기업선택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상반기 공채 외 채용연계형, 체험형 인턴을 모집 중이다. 인크루트는 운영하는 공기업·공공기관 전문관을 통해 기관들의 신규 채용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렌터카에 결함·리콜 있으면 영업 못한다

국토부, 이달 중 입법예고

앞으로 결함 사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리콜 대상 렌터카가 이미 대여 중이라면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리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설을 우편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인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령은 지난 4월 7일 개정돼 10월 8일부터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렌터카는 리콜이 생기면 차량이 리콜을 받는 동안 사업자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

았다.

이 때문에 장기 렌터카의 경우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결함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가 리콜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막강한 규제 방법은 없었다.

특히 시행규칙은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함 사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렌터카 사업자의 통지 및 리콜 조치 의무를 명시해 미 실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사용자의 위험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렌터카가 리콜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령은 이달 중 입법예고, 7~8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공포, 최종적으로 10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